



4·10 총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노동 없는 4·10 총선	3
대전환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기층의 요구, 그러나... ..	4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결정과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실패	6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10

요약

일찍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했던 민주노총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상과 방향에 대한 균열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2023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결정을 통해 진보정치세력 단결과 도약을 추진하려 했다. 정치방침의 이행 과정에서의 총선방침의 주요 목표는 민주노총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이었다. 그러나 총선방침은 실천되지 않았다. 총선의 전초전이라 불리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를 포함해 총선에서의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주변부로 밀려났고 진보정치세력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 없는 4·10 총선이였다.

이 글은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고 과제들을 풀 필요성을 강조한다.

첫 번째,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 “불평등 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했지만 반윤석열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들이 함께 결합하지 못하고 조합원과 당원 운동으로 확장시키지 못한 문제이다.

두 번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을 포함하여 선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 당사자인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진보정당들 상층 중심의 내부협상으로 전개된 문제이다.

세 번째,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해 원내에 진출한 정당만을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이다.

네 번째, 거대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 운동 부재 속에서의 선거 대응 한계이다.

다섯 번째, 윤석열 심판 선거에서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드러난 진보정당 독자성과 반윤석열 정치연합에 대한 정세 판단과 가치판단의 차이이다.

여섯 번째, 노동·사회운동의 성과와 경력을 개인화하고 선거 승리만 중요시하는 낡은 정치 틀에 갇힌 진보정치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석·진단되지 않은 채 누적된 결과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방법론의 구체화는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운동의 당위적인 언어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설계하고 평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비난, 증오, 혐오의 언어가 아닌 성찰과 연대의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왼쪽’ 대안정치세력의 부재 속에서 정권의 위기는 다른 거대 정당에게 반사이익을 주게 된다. 보수정치의 위기가 정치적 기회가 되려면 진보정치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실천할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방침에 규정한 원칙과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조합원, 간부들의 평가와 고민을 수렴하고 조합원, 간부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결심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과 혁신 과제에 대한 전 조직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책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책대회의 주요 의제로 노동자정치세력화도 설정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조직적 태세를 갖추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노동 없는 4·10 총선

정권의 위기는 이를 비판하고 대항하는 정치세력에게 정치적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기성정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보수정치의 위기는 진보·좌파 정치세력에게 정치적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거대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시스템에서 소수정당인 진보·좌파 정치세력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전략과 지지하는 계급·계층을 결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평가된다. 2023년 11월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자신을 탄핵하려면 하라며 ‘탄핵 총선’의 승부수를 던졌고, 정당 내외에 있던 정치세력들은 ‘반윤석열’, ‘반이재명’, ‘거대양당 비판’ 등의 진영논리로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진행하였다. 그 후 38개의 정당이 등록된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졌고, 유권자는 67.0%의 높은 투표율로 여소야대의 ‘윤석열 심판’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번 총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야당과 이렇게 큰 격차로 패한 것이 처음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중단을 요구하는 거대한 총선 민심을 확인한 선거였다.¹⁾

[표 1] 22대 총선 결과 의석수

지역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26.69%)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36.67%)
		조국혁신당	12석(24.25%)
개혁신당	1석	개혁신당	2석(3.61%)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새로운미래	0석(1.70%)
		자유통일당	0석(2.26%)
녹색정의당	0석	녹색정의당	0석(2.14%)
		소나무당	0석(0.43%)
노동당	0석	노동당	0석(0.09%)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자 더불어민주당 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

1) SBS(2024.4.11.), “민주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다. 제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계의 승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민중 세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대안정치세력의 부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실질적 대안세력이 아니라 반윤석열의 민심을 등에 업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노동 없는 선거였다. 한국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전개된 디지털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문제들과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화로 더 열악해진 노동 문제는 공론화되지 못했고 그 동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노동중심성'을 강조했던 진보정당들과 진보정치세력은 대안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은 불평등 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해 2023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깊은 질문이 필요하다.

대전환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기층의 요구, 그러나...

민주노총은 2023년 5월 10일 일찍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선포하고 퇴진 운동을 전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둬들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친재벌·반노동 정책 추진과 노동운동 탄압,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과 사회 공공성 약화, 노조법 2·3조 등의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전쟁 위기 심화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은 더 강화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분노와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년 1월~2월에 실시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22대 국회 진보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법 2·3조 재개정이 50개 정책과제에서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1순위로 꼽혔다. 3개 영역(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별로 1~3순위를 살펴보면, 노동영역에서는 노조법 2·3조에 이어 △주 4일 근무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기업교섭 제도화 및 단협효력 확장이 2·3순위로 뒤를 이었다. 공공성·경제민주화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부 지원 확대 및 의사간호인력 확대, 공공병원 확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

민 주거권 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이 1~3순위로 뽑혔다. 사회대개혁 영역에서는 △노조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1~3순위에 뽑혔다.²⁾ 이 과제들은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거대 보수 양당 정치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사실상 대전환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진보적인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균열이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선거 방침을 결정한다고 해서 간부들과 조합원, 진보적 대중들이 결집할 수 있을까? 게다가 누적된 갈등 속에서 진보정당들의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보정당들의 노동계급성과 정치세력화에 대해 간부, 조합원들의 신뢰수준도 약한 조건에서 '함께' 정치세력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론이 필요할까?

이러한 과제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평가에 관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부각되었다.³⁾ 평소 지지 정당과 선거에서 투표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상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정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해서 “기존 진보정당들을 지원하는 것”이 3.9%로 제일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동일 질문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단일 진보정당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47.9%)과 “노동자나 노조가 노동자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15.4%)이 각각 1, 2순위의 응답률을 가졌지만 “정당 상관없이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11.5%),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노동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8.4%)이 기존 진보정당들을 지원하는 방법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차지해 노동자정치세력화 균열과 진보정당들에

2)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정책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는 2,110명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노동영역, 공공성·경제민주화영역, 사회대개혁 3개 영역과 16개 이슈, 50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조합원 요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각 이슈별로 응답자 수의 빈도를 분석하고, 응답자 특성별로 1위 응답이 다른 정책 과제를 분석하였다.

3)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평가작업을 위해 민주노총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고, 가맹조직별 조합원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취합하였다. 그리고 3,979명의 표본을 분석하여 지지정당과 정당 일체감, 진보정당 외 다른 정당을 찍은 이유, 대선에서 관심가진 주요 정책과 이슈, 세대차이, 선거방침, 후보단일화에 대한 생각,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역할 등을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한 신뢰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확대간부들의 ‘보수화’로 단정짓기 어렵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당 외 다른 정당 후보를 찍은 확대간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27.8%, “기득권 정당 후보 중 싫어하는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16.5%,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서” 9.8%, “진보정당들이 갈라져 있어서” 9.6%,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9.1%, “기득권 정당과 차별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 7.8%, “내가 속한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라서” 2.4% 순으로 나타나 진보정당의 분열, 후보, 정책 등과 같이 진보정당과 관련된 직접적 요인이 26.5%로 크게 차지했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선거법 등의 외부적 요인 외에도 진보정치세력 결집 실패 등의 진보정당과 관련된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보정당에 대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우려의 시선과 고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결정과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실패

앞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평가에서 드러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상과 방향의 균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방침 재정립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다.⁴⁾ 2023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사업으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수립을 주요 과제로 결정한 후 4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정치방침안과 3개의 총선방침안을 둘러싼 논쟁 끝에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했다.⁵⁾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공론화했던 민주노총의 이 정치활동은 “격변기 열악한 정치적 지형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발상과 고민의 일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⁶⁾

4) 민주노총(2023), 「민주노총 2022 사업보고」, 710쪽.

5) 총선방침 3개안은 △ 2024년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진보-좌파 정당 사이의 합의를 전제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대응방안 △ 조합원이 주도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 방안 △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선거연대 방안이다.

6) 김동수(2023.6.2.),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 추진모임, 11쪽.

2023년 민주노총이 결정한 정치방침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방도의 주요 키워드로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전략 수립하고 실행”,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 “노동중심성 확보”,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내는 방식”, “직접정치, 광장정치”,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 “노동 중심 진보정당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방침 이행 과정에서의 총선방침 목표는 “민주노총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이었다.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어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여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 진보정당과의 적극적인 총선 공동대응 추진을 방침으로 규정하였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은 “특정 연대연합 방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행에 착수한 후 각 주체들에게 참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연대연합방안을 정하는 데서부터 각 주체 간에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이것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관계, 진보정당과 진보정당 관계에서 무너진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표 2] 2023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민주노총 정치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상호 존중하고 단결, 연대하여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7) 민주노총(2023.9.14.), 「민주노총 제77차 임시대의원대회」, 112쪽.

-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전환 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해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 자료 : 민주노총 보도자료(2023.9.14.), “민주노총 제7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수립”.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의 결정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버린 정치운동을 전면화하고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추진하며 실리적으로 대응하던 노동조합 '체질'을 철저히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에게 노동중심성을 토대로 진보정치세력의 결집과 단결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2024년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총선의 전초전이라 불리었던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민주노총 없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4당이 모여 논의되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⁸⁾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진보정당들의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진보정당들과의 후보단일화 논의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정의당 후보와 당 지도부와의 이견이 있는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했다.⁹⁾

총선방침의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된 진보정치세력들의 연대연합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주변화되었고,¹⁰⁾ 진보정당들이 추진한 연대

8)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4개 진보정당이 함께 회의를 했으나, 후보단일화 논의에서 정당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를 성사되지 못하고 각 당별로 출마하였다.

9) 레디앙(2023.9.22.), “강서 보선 정의 권수정, 논란 수습하고 후보 등록”.

연합 제안에서 민주노총의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내용도 존중되지 않았다. 2023년 11월 정의당은 녹색당을 우선으로 진보당 등에게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선거연합신당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보 4당이 모이는 진보연합을 역 제안했으나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정의당과 녹색당은 녹색정의당으로, 진보당은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에 참여하며 이후 민주당·진보당·시민사회의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구성되었다.¹⁰⁾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위성정당 성격 논쟁과 진보당 지지 철회 논쟁으로 매몰되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 확대·강화로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한다'는 총선방침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실패 속에서 진보정당들이 각개약진 한 결과를 확인한 선거였다.

진보정치세력이 결집되지 않는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 2012년 8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세 번의 대통령 선거(2012년, 2017년, 2022년), 세 번의 지방선거(2014년, 2018년, 2022년),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2016년, 2020년, 2024년)가 있었고, 그 중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간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선거는 2022년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운동 이후 맞이했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보정치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장은 없었고, 정의당과 민주연합당은 따로 후보를 등록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반윤석열 투쟁이 거세어지며 진보정치세력 결집으로 대안세력으로의 도약이 요구되었으나 반윤석열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과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보정당들의 연대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실패가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 분당을 거치며 누적된 진보정치세력 간의 갈등 관계와 진보정당 정체성의 다원화,¹²⁾ 일상·지역정치의 부재, 선거 때에만 민주노총을 찾는 진보정당, 정당 밖의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이 후보단일

10) 이 시기 민주노총은 직선 4기 임원을 선출하는 시기였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22일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선거 공지를 시작으로 10월 22일~26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민주노총 4기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11) 오마이뉴스(2023.12.7.), "진보당" 정의당의 '선거연합신당' 거부... '진보정치연합'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연합 성격 논쟁 속에서 시민사회 대표성에 대한 논쟁도 나타났다.

12)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 간의 갈등은 민주노총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재현되어 민주노총 내에서의 갈등이 더 높아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기도 한다.

화와 연대연합 논의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문제 등은 후보단일화나 진보정치세력 결집이 실패한 선거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결과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현상이 더 열악해지고 사회불평등이 심각해져 대전환이 요구되는데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진보정치세력에게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이 다른 선택으로 응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들이 진보정당들을 대안세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에 대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와 대중의 탓으로 돌리거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탓으로 돌리거나,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 시스템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진보정치 위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경우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노동운동 조직의 정치운동의 상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실패라고 말하기 어렵다. 위기와 실패라는 말만 하게 되면 그 언어 안에 갇히게 된다. 민주노총은 2023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결정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방도에 대해 ‘문서화’했지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도 실천도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치방침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고 고민을 풀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반윤석열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들이 함께 결합하지 못하고 조합원과 당원 운동으로 확장시키지 못한 문제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 “불평등 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구성¹³⁾했지만 형식적 회의를 넘어 목적에 맞는 결합과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 대전환에 대해 진보

13) 민주노총(2022.9.29.), “민주노총,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정치세력이 의제화하고 공동실천을 할 수 있는 토대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을 포함하여 선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 당사자인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진보정당들 상층 중심의 내부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치방침까지 수립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민주노총이 정작 선거 대응에서 제3자가 되는 문제를 가진다. 현재 민주노총 개입 없이 진보정당들 연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개입력을 높여서 진보정당들의 연대와 진보정치세력 결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해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이다. 이것은 제도(의회)정치와 운동정치를 분리해서 원내에 진출한 정당만을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보고 정당정치를 압박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의 힘을 배제하는 문제를 가진다. 선거 대응에서 민주노총의 주변화와 진보정당들 중심의 협상은 이 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자의 직접정치, 광장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번째, 거대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 운동 부재 속에서의 선거 대응 한계이다. 거대양당 체제를 보장하는 선거 시스템은 정권 심판 선거로 귀결되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압박받게 되고 진보정치세력은 소수정당화 될 수 밖에 없다.¹⁴⁾ 이런 조건을 돌파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은 적극적인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위성정당 금지, 이중당적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의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세력화 운동을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윤석열 심판 선거에서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드러난 진보정당 독자성과 반윤석열 정치연합에 대한 정세 판단과 가치판단의 차이이다. 종속적인 한미 관계와 분단체제 속의 한국 정치에서 보수 우익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야권연대 형성에 대해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은 늘 딜레마를 겪는다. 실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후보가 경쟁하며 완주하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근소한 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당선된 경우 진보정당이

14) 허현무(2024),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제와 전망”.

모든 비난을 받곤 한다. 현재의 선거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이후 선거에서도 겪을 수 있는 쟁점이다. 이에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이 딜레마를 돌파하며 성장·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¹⁵⁾

여섯 번째, 낡은 정치 틀에 갇힌 진보정치의 문제이다. 정당을 통해, 선거민주주의 활용을 통해, 제도정치 진출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 또는 노동중심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다 노동·사회운동의 성과와 경력을 개인화하고 선거 승리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 경향이 커질수록 기존 정치체제의 문법에 갇히게 되고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 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상의 균열도 더 심해질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석·진단되지 않은 채 누적된 결과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방법론의 구체화는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운동의 당위적인 언어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설계하고 평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비난, 증오, 혐오의 언어가 아닌 성찰과 연대의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은 좋지 않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위반한 전직 간부 징계 건 등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실패 원인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¹⁶⁾ 이렇게 되면 간부와 조합원 다수가 더불어 민주당계에 투표하고 국민의힘에도 투표하는 간부와 조합원이 있는 현실에서 조합원과 민주노총 상층과의 괴리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15) 다른 국가의 좌파정당들도 소수 노동계급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간계층, 보수 정치세력과의 연대연합을 하는 딜레마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 노동자당(PT)를 들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당을 통한 노동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상 이를 포함한 다양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도덕적 비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진단과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16) 더불어민주연합에 결합한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종덕,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에 대해 2023년 총선방침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국정 방향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국정 기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파시즘적 검찰독재화가 중단되지 않고 민주주의 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 전쟁위기가 심화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은 더 강화될 것이고 체제 전환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들은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왼쪽’ 대안정치세력의 부재 속에서 정권의 위기는 다른 거대 정당에게 반사이익을 주게 된다. 보수정치의 위기가 정치적 기회가 되려면 진보정치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실천할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방침에 규정한 원칙과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조합원, 간부들의 평가와 고민을 수렴하고 조합원, 간부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결심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과 혁신 과제에 대한 전 조직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책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책대회의 주요 의제로 노동자정치세력화도 설정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조직적 태세를 갖추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